

여성복지정책동향

대전광역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걸음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확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무와 책임들을 명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적, 성인 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법안은,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 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바탕하여 각 시·도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하는데,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그리고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대전광역시 가족

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구상하고 있는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대전”이란 비전을 가지고, ‘취약가정의 가정 안정성 증진’ ‘양성평등한 가족·사회 문화 조성’ ‘지역사회구성원 간 조화와 연대 강화’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말 완성 되는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의 「대전광역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대전시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핵심 영역과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 가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대전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 실태 조사 및 가족 복지 욕구 조사 결과와 2007년 한 해 동안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가 추진해 왔던 가족공동체포럼과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결과물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지난 일 년 동안 가족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연구자,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왔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가족 지원 사업들을 구상해 왔다.



〈그림〉 이규창 강연